

미군정기 문화유산 관리 방향 연구

김 현 정*

목 차

- I. 머리말
- II. 미군정의 국립박물관 설립 과정
- III. 문화유산정책의 방향성 부재
- IV. 미군정 문화유산정책의 구조적 특징
- V. 맷음말

국문초록 | 본 연구는 광복 직후의 국립박물관 개관, 호우총 발굴, 구왕궁사무청 설립 등 일련의 문화유산 관련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군정기 문화유산 정책의 방향성과 구조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국립박물관 개관과 호우총 발굴은 한국인에게는 문화 주권 회복의 상징이었으나, 미군정에게는 남한 내 미국 혜게모니를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수단이었다. 이에 미군정은 미국의 정책에 부합하는 인물로 김재원을 관장에 임명하고, 현상유지 기조 아래 일본인 아리미쓰 교이치를 유임시켰다.

미군정의 현상유지기조는 이왕직 재산에 판단을 향후 수립될 정부로 넘긴 결정은 물론, 개성 만월대와 경복궁 내 미군 막사 공사 등 문화유산 보전에 대한 무관심과 무계획성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일제 식민지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일본인에 의한 한국 문화유산 관리를 정당화했던 랭던 워너와 같은 미국 전문가들의 식민주의적 인식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결국 미군정기 문화유산 정책은 미국식 민주주의 담론과 일제 식민유산이 중첩된 ‘이중적 식민성’의 구조 속에서 전개되었

* 金賢晶.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gadinma@gmail.com

투고일: 2025. 05. 15. 심사완료일: 2025. 06. 16. 게재확정일: 2025. 06. 20.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5.48..197>

다.

핵심어 | 국립박물관, 현상유지정책, 이중적 식민성, 김재원, 아리미쓰 교이치, 행던 위너

I . 머리말

1945년 12월 3일 개관한 국립박물관은 해방 이후 한국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 회복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이루어진 호우총(壺杆塚) 발굴은 ‘국립박물관’ 명의로 실시된 최초 고고학 조사로 한국 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사례로 간주된다. 이 두 사건은 해방공간에서 한국인이 주체적으로 과거를 복원하며 탈식민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시작했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간 국립박물관 개관과 호우총 발굴의 성과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미군정이 마치 탈식민의 주체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미군정이 실제로 탈식민적 문화유산 정책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국립박물관은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건물, 소장품, 운영 체제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일제 식민성을 계승했다는 비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¹⁾ 더욱이 해방 이후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미군정의 지시로 개관했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자주적 성과로 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박물관의 물리적 환경은 일제 시기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운영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지만, 미군정은 이를 ‘국립박물관’으로 새롭게 명명하고 출범시켰다.

따라서 일제가 조선 지배 정당성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한 조선총독부박물

1) 최광식, 「미래를 향한 박물관을 위하여」, 『박물관에 살다 한국 박물관 100년의 사람들』, 국립중앙박물관, 2009, 367~368쪽. ; 오영찬, 『조선총독부박물관과 식민주의』,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344~345쪽.

관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의 역사적 전통성과 고유성을 보여주는 국립박물관으로 변모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미군정은 이 기관을 어떻게 개편하고, 어떠한 정체성을 부여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문화정책 기조가 작용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군정기 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²⁾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마저도 대부분 국립박물관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 연구는 주로 초대관장 김재원의 회고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 기록들은 국립박물관의 설립 과정을 상세히 전하고 있으나, 그 과정 속에 반영된 미군정의 정책 기조까지 포괄적으로 조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군정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사업인 국립박물관 개관과 호우총 발굴을 중심에 두고, 당시 이들 사업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다양한 인물들의 기록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성격과 그 이면에 자리한 미군정의 정책 기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김재원의 발탁과 일본인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³⁾의 중용에 주목하여 국립박물관 설립 과정을 기준으로 더 심층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미군정 문화정책의 정치적 목적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이들 사업이 단순한 문화적 성과가 아니라 미군정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정책적 산물임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미군정기 한국 문화유산 관리의 실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2) 김균, 「미국의 대외문화정책을 통해 본 미군정 문화정책」, 『한국언론학보』 44(3), 2000. ; 정무정, 「美軍政期의 문화정책과 미술계」, 『미술연구』 18, 2004, 147~166쪽. ; 안진이, 「미군정의 문화정책과 시각문화, 1945~1948」,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해은, 「미군정의 한국문화재 조사 활동」, 『서지학연구』 85, 2021, 181~198쪽.

3)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 1907~2011)는 1931년 고적조사 사무총탁으로 조선총독부 근무를 시작하여 1941년 조선총독부박물관 주임이 되었다. 미군정의 고문으로 유임되어 있다가 호우총 발굴 직후 1946년 5월에 일본으로 귀환하였다.

위해 기존 연구에서 거의 조명되지 않은 구왕궁사무청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구왕궁사무청은 대한제국 황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이왕직(李王職)의 기능을 계승한 기관으로 궁궐, 왕릉, 종묘,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산림 등 방대한 문화자산을 관리했다. 국립박물관을 능가하는 대규모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의 정책적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군정이 국립박물관과 구왕궁사무청에 대해 상이한 정책적 태도를 취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박물관 개관 과정, 구왕궁사무청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 미군 주둔에 따른 문화유산 훼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군정 문화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그 이면에 내재한 식민지적 연속성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해방공간에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Ⅱ. 미군정의 국립박물관 설립 과정

1. 김재원의 국립박물관장 발탁과 배경

박물관을 담당한 학무국은 1945년 9월 11일 얼 라카드(Earl N. Lockard) 대위가 학무국장에 임명되면서 출범했다. 라카드는 부임 직후 한국 인사들을 직접 접촉하며 한국의 상황을 파악해 갔으며,⁴⁾ 이런 과정에서 김재원이 국립박물관장에 채용되었다.⁵⁾ 김재원은 자신의 임용 경위에 대해서, 벨기에 서 사용하던 명함을 라카드에게 보여주고 채용되었다는 일화로 간략히 언급

4) 정태수, 「미군정기 한국교육행정의 기구와 요원의 연구-미국측 사료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6(1), 1988, 80쪽.

5) 김재원의 공식적 채용은 10월 16일이다. <경성대학 각부장, 각 전문학교장 임명>, 미육군사령관 임명사령 제16호, 1945.10.16.

했다.⁶⁾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학무국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던 최승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최승만은 박물관장 후보로 몇몇 인물을 두고 자신의 상관인 유억겸과 논의한 끝에 김재원을 최종 발탁하였다.⁷⁾ 최승만은 김재원을 제삼자를 통해 소개받았으며, 그의 벨기에에서 고고학 이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회고하였다.⁸⁾

하지만 고고학이 김재원의 채용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재원은 애초에 교육학으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⁹⁾ 이후 벨기에에서 동양고고학 연구자인 칼 헨제 교수의 조수를 하며 비로소 고고학을 접했다.¹⁰⁾ 1940년 귀국 이후에는 독일어 강사로 줄곧 활동했다. ‘경성고고담화회’ 활동으로 조선총독부박물관 관계자와 어느 정도 교류는 있었지만,¹¹⁾ 고고학자로 활동할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김재원이 박물관과 직접적인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박물관을 접수하라는 매일신보사 홍종인의 권유로 백남운을 찾아가면서이다. 해방 직후 일제의 학술기관 접수는 백남운을 중심으로 1945년 8월 16일에 조직된 조선학술원이 주도했다.¹²⁾ 백남운은 김재원에게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접수를 맡겼고,

6) 김재원, 『박물관과 한평생』, 탐구당, 1992, 85쪽.

7) 최승만(1897~1984)은 오천석, 최현배와 더불어 미군정 설치 직후 학무국 운영을 주도했다(정태수 편, 『미군정기 한국교육사자료집』上, 흥지원, 1992, 56~57쪽).

8) 최승만, 『나의 回顧錄』, 인하대학교출판부, 1985, 362쪽.

9) 김재원은 독일 뮌헨대학에서 『조선의 초등학교, 일본의 동화교육(Die Volksschule in Korea, die japanische Assimilationserziehung)』 논문으로 1934년 박사학위를 받았다(오영찬, 앞의 책, 362쪽).

10) 칼 헨제(Carl Philipp Hentze, 1883~1975)는 독일 출신으로 벨기에 겐트 대학에서 중국 고고학, 역사와 문화 등을 연구했다. 김재원은 박사학위 이후 벨기에에서 헨제 교수의 조수가 되어 6년 동안 중국과 일본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게 되었다(김재원, 앞의 책, 1992, 54~56쪽).

11) 오영찬, 앞의 책, 2022, 332~335쪽.

12) 박명수, 「해방 직후 조선학술원의 창립과정과 그 성격」, 『승실사학』 45, 2020, 297~304쪽.

여비를 지원하며 경주박물관 접수도 함께 지시하였다. 그래서 김재원은 먼저 서울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접수하고, 이어 경주로 가서 일본인 관장을 해임하고 한국인을 후임으로 지정하는 등 박물관 접수활동을 했다.¹³⁾

하지만 조선학술원 일원으로서 박물관 접수 활동이 김재원의 관장 임용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군정은 건국준비위원회를 비롯한 해방공간의 정치조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승만의 회고에서 알 수 있듯이, 김재원의 관장 임용에는 미군정이 신뢰하는 인사로부터 추천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실제 김재원은 조선교육위원회 김성수, 조선교육연구회 안호상, 언론인 홍종인을 비롯한 친미 성향 인사들과 가까웠다. 이러한 인맥은 김재원이 미군정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배경이었다.

게다가 김재원의 벨기에 이력 자체가 미군정의 신뢰를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승만은 김재원의 벨기에 고고학 이력을 특별하게 평가했고, 김재원도 벨기에에서 사용하던 명함을 라카드 학무국장에게 보여주며 자신을 증명했다.¹⁴⁾ ‘벨기에 헨제 학자와 같이 일한 것이 인연이 되어 박물관장이 되었다.’라고 김재원이 밝혔듯이, 벨기에서 고고학 활동은 김재원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

또한 벨기에 이력은 미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인맥으로 확장성도 가졌다. 그 일례로 뉴욕대 교수 알프레드 살모니¹⁵⁾를 들 수 있다. 살모니는 김재원의 고고학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헨제와 공동으로 아시아미술

13) 有光教一, 「私の朝鮮考古學」, 『朝鮮學事始め』, 青丘文化社, 1997, pp.188~190.

14) 김재원, 앞의 책, 1992, 84쪽.

15) 알프레드 살모니(Alfred Salmony, 1890~1958)는 독일 출신으로 본(Bonn) 대학에서 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나치의 탄압으로 미국으로 이주하여 1938년 뉴욕대에 정착했다. 2차 대전 중에는 미국학술협회 소속의 ‘모뉴먼츠 맨’으로 활동했다(<https://arthistorians.info/salmony/> 접속일:2025.5.10.). 모뉴먼츠 맨(Monuments Men)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이 전쟁 지역 내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한 '기념물·미술·기록물 부서(Monuments, Fine Arts, and Archives Section, MFAA)' 소속 전문가들을 지칭한다.

잡지 『Artibus Asiae』를 창간했고 미국에서 활동한 아시아미술 전문가이다. 김재원은 벨기에 시절인 1936년부터 살모니와 친분이 있었고,¹⁶⁾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지속되었다.¹⁷⁾

일각에서는 김재원의 영어구사력, 유럽 유학을 관장 임용에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조건은 당시 미군정이 행정관리 임용에서 우선시한 부분이다. 하지만 해방공간에서 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물은 김재원 뿐만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유호이다. 도유호는 오스트리아 빈 (Wien)대학 선사연구소에서 고고학과 민속학을 연구한 학자이며,¹⁸⁾ 제1회 건국준비위원회 개최에 초청된 135인에 포함될 정도의 사회적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¹⁹⁾ 또한 도유호의 영어구사력은 6.25전쟁 휴전회담에서 북측 영어 통역으로 활동할 정도로 뛰어났다.²⁰⁾ 따라서 최승만이 도유호가 아닌 김재원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고고학 전공, 유학 경험, 영어 능력 등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미군정과 긴밀히 연결된 유력자의 추천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방공간에서 김재원이 관장으로 임용된 배경은 미군정과 가까운 인사의 추천 그리고 벨기에서 활동, 이를 통해 형성된 미국 인맥으로 볼 수 있다. 즉 김재원의 발탁은 친미 성향의 인사를 통한 인재

16) 김재원, 『경복궁야화』, 탐구당, 1991, 65쪽.

17) 살모니는 김재원의 추천으로 ‘미국 공보 및 교육 교류법’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방한하기도 했다(정무정, 「《한국 국보전》 전사(前史): 불발된 1947년 한국미술전 계획」, 『미술사학』 47, 2024, 89쪽.).

18) 도유호(都宥浩, 1905~1982)는 한국인 최초의 고고학자로 평가된다. 1931년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1935년 오스트리아 빈대학 사학과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논문으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재원과 같은 함흥 출신으로 김재원의 결혼식에서 독일어로 축사를 할 정도로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였다(한창균, 『하답 도유호』, 혜안, 2017, 54~57쪽).

19) 「건준, 제1회 위원회 개최를 위한 초청장 발송」, 『매일신보』, 1945.9.1.

20) 최효은, 「한국전쟁 정전협상 통역은 누가 했을까: 번역고고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한국인 동역자 탐색」, 『번역학연구』 24(1), 2023, 245쪽.

추천이라는 미군정의 일반적 관료 임용 방식에 따른 것이었으며,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된 것이다.

2. 아리미쓰 교이치의 유임과 국립박물관으로의 재편

미군정은 군정 개시 이후에도 일본인 관리를 해임하지 않다가 한국인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9월 14일에서야 총독부 국장급 이상을 해임했다. 그러나 행정 공백을 이유로 미군정은 이들을 ‘고문’으로 다시 유임시켰다.²¹⁾ 이러한 상황은 박물관도 마찬가지였다. 9월 21일, 미군정은 총독부 내 일본인 관리 대부분을 파면했으나 총독부박물관 직원 아리미쓰 교이치를 해임과 동시에 고문으로 임용했다. 아리미쓰는 유임된 일본 관리 중에서 유일하게 두 차례에 걸쳐 채용되었다.

첫 번째 채용은 조속한 박물관 개관이 목적이었다. 당시 미군정 내, 특히 한국인 직원들 사이에 잔류 일본인의 배제 의견이 강했으나, 미군정은 오히려 1945년 10월 22일 군정명령으로 아리미쓰의 채용을 확정지었다. 이후 아리미쓰는 안정된 신분으로 전시실 구성과 전시품 선정, 전시품의 명칭과 시대구분, 해설문 작성 등을 직접 수행하며, 총독부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전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45년 12월 3일, 드디어 국립박물관 개관식이 성대히 개최되었으나, 아리미쓰는 한국인들의 반감을 의식하여 개관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국립박물관 개관을 자신이 주도했다는 점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²²⁾

아리미쓰는 패망한 적국의 관리였으나 미군정의 요원으로서 상당한 대우를 받았다. 10월 정식 채용 이후에는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꼽히는 경복궁 내 관사까지 특별히 제공받았다. 무엇보다도 아리미쓰는 박물관 개관

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전군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04쪽.

22) 有光敎一, 앞의 논문, 1997, pp.199~202.

준비에 자율권을 보장받았다. 그래서 아리미쓰는 “나의 지식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었고, 나의 뜻대로 진열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은 내 생애에서 가장 뿌듯했던 날들이었다.”라고 회상했다.²³⁾ 아리미쓰에게 국립박물관 개관은 태평양전쟁으로 일시 폐쇄했던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재개관과 다르지 않았다[그림 1].²⁴⁾

두 번째 채용, 즉 재채용의 명분은 고고학 발굴조사법 전수였다. 아리미쓰의 귀환은 12월 19일로 확정되어 있었으나, 그 전날인 12월 18일 학무국의 유진 크네즈²⁵⁾는 돌연 아리미쓰에게 재채용을 통보하였다. 이는 일본인 잔류를 금지하던 당시 정책과도 배치되며, 해고한 일본인의 재임용은 미군정에서도 전례가 없었다. 그럼에도 크네즈는 아리미쓰의 전문성이 박물관 운영과 발굴 조사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거듭 강조하며 상부를 적극 설득하였다. 재채용 보고서를 다섯 차례나 수정할 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발굴 종료 즉시 귀환을 조건으로 겨우 승인을 받았다.²⁶⁾ 이는 아리미쓰의 체류를 원했던 김재원의 의사를 크네즈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결과였다.²⁷⁾

한편, 아리미쓰의 잔류는 미군정의 이해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

23) 有光敎一, 앞의 논문, p.201.

24) 국립박물관의 전시실 구성과 체제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을 그대로 따랐다(장상훈, 「아카이브기행 8-해방공간 국립박물관의 전시(1)」, 『박물관신문』 564호, 2018.).

25) 유진 크네즈(Eugene I. Knez, 1916~2010)는 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했고, 1945년 11월부터 1946년 5월까지 미군정의 학무국에서 근무했다. 1949년 7월 주한 미국대사관의 문화 담당관으로 다시 한국에 왔고, 6. 25전쟁 당시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부산 피난을 도왔다. 한국 마을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로 1959년 시러큐스 대학(Syracus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에 한국 문화유산 보호와 선양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https://koreanstudies.com/pipermail/koreanstudies_koreanstudies.com/2010-June/007956.html 접속일: 2025.5.10.)

26) 有光敎一, 앞의 논문, 1997, p.206.

27) 김재원, 1991, 앞의 책, 101쪽.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그의 재임용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컸다. 경성대학의 역사학자 이인영과 고고학자 도유호는 아리미쓰를 직접 찾아가 한국의 발굴은 시급하지 않고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 연구자의 수준이 향상된 뒤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며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아미리쓰는 일본 귀환을 희망했으나 크네즈는 “미군정의 사업인 발굴이 종료되기까지 불가능하다.”라고 하며, 아리미쓰를 오히려 ‘잔류 필요 일본인’으로 분류하고, 체류 기간도 명시하지 않은 채 잔류시켰다.²⁸⁾ 이는 미군정이 국립박물관 발굴을 자체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그 수행을 위해 아리미쓰의 잔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발굴이 미군정의 사업이었다는 점은 발굴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서 드러난다. 아리미쓰가 추천한 노서리 140호분(호우총)이 발굴지로 확정되자, 발굴지 배상부터 시설물 설치까지 일련 과정을 미군정이 직접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발굴이 시작된 이후 크네즈를 비롯한 미군들은 인근 지역의 미군 캠프에 숙소를 마련하고 매일 발굴 현장에 와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림 2]. 5월 25일 발굴 종료된 후에는 미군의 호송 속에서 출토유물을 서울 국립박물관으로 옮겼다.²⁹⁾

경주발굴이 미군정의 관심 사업이었다는 또 다른 근거는 연합군 최고사령부(General Head Quarters, GHQ)의 중단 지시에도 오히려 이를 설득해 발굴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1946년 4월 말, GHQ는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모스크바 3상 회의 국가들이 미군정의 국립박물관 발굴 지원에 반발 할 것을 우려했다. 랭던 워너³⁰⁾를 비롯한 GHQ의 전문가들은 한국에 발굴이

28) 有光敎一, 앞의 논문, pp.212~223.

29) 유진 크네즈(Eugene I. Knez), 『한 이방인의 한국사랑』, 국립중앙박물관, 1997, 27~29쪽. : 有光敎一, 1997, 앞의 논문, pp.222~226.

30) 랭던 워너(Langdon Warner, 1881~1955)는 하버드대를 졸업한 이후 아시아 여러 지역을 탐험했고, 보스턴미술관 후원으로 1906년 일본을 찾은 이후 일본 예술에

필요하다면, 한국인을 미국에 보내어 발굴을 배워오게 하거나, 미국 학자를 한국에 초빙하여 한국인 연구자를 육성하는 방안을 권고했다.³¹⁾ 그러나 크네즈는 GHQ의 위너를 설득하였고, 결국 발굴 승인을 받아냈다.

1946년 4월 30일, 워너가 경주 발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립박물관을 방문했을 당시, 크네즈는 신생 박물관 직원들이 아리미쓰로부터 발굴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크네즈는 하버드대학교의 일본학자 라이 샤워(Reischauer) 교수 논문에 아리미쓰 연구가 인용된 점을 근거로 아리미쓰를 유능한 고고학자로 평가하고 있었다.³²⁾ 워너 역시 원래부터 조선총독부의 고고학 성과를 높이 평가해온 인물이었고, 이에 크네즈의 요청을 수용하여 아리미쓰가 주도하는 경주 발굴을 승인했다[그림 3]. 이처럼 크네즈와 워너가 공유한 아리미쓰에 대한 신뢰는 경주 발굴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아리미쓰의 재채용 명분과 달리, 경주 발굴이 국립박물관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비록 ‘호우’가 출토되는 엄청난 성과를 얻었지만, 실제 발굴 기간은 겨우 2~3주에 불과했다. 또한 아리미쓰는 발굴 종료 직후 경주에서 바로 일본으로 귀환하였기에 유물 정리나 보고서 작성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발굴보고서 발간 경험이 없고, 고고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김재원은 호우총 발굴보고서 발간을 주저하기도 했다.³³⁾ 발굴법을 전수하기에는 발굴 기간이 너무 짧았고, 후속 작업에도 아리미쓰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심취했다. 일본 전공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2차 대전 중에 모뉴먼츠 맨으로 활동하며 아시아미술의 최고 권위자로 명성을 쌓았고, 1946년 3월 GHQ의 고문이 되었다 (<https://www.monumentsmenandwomenfnd.org/monuments-men-and-women/langdon-warner> 접속일 :2025.5.10.).

31) 有光敎一, 1997, 앞의 논문, pp.224~225.

32) 유진 크네즈(Eugene I. Knez), 『한 이방인의 한국사랑』, 국립중앙박물관, 1997, 27~29쪽.

33) 유진 크네즈, 앞의 책, 1997, 30쪽.

애초부터 아리미쓰의 잔류는 국립박물관 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미군정은 아리미쓰에게 박물관 개관을 위임했지만, 조선총독부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공식적 인수인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³⁴⁾ 발굴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군정은 발굴 자체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나, 조사보고서 작성이나 유물 정리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발굴종료 즉시 귀환을 재채용 조건으로 삼았다. 이는 경주발굴이 신생 국립박물관의 역량 강화 목적이 아니라, 박물관 개관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관심과 호감을 얻기 위한 미군정의 선전 사업이었음을 시사한다. 미군정이 아리미쓰를 두 차례에 걸쳐 고문으로 임명한 것은 국립박물관 기반 구축보다는 이러한 가시적 성과를 연출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III. 문화유산정책의 방향성 부재

1. 구왕궁사무청의 법적 지위 모호성

미군정은 조선총독부박물관보다 더 많은 문화유산을 관장했던 이왕직의 개편에 소극적이었다. 초기에는 이왕직이 조선총독부의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라 일본 궁내성 소속이라는 특수성과 관련이 깊다. 그렇기에 미군정은 1945년 11월에는 이왕직을 ‘구왕궁’으로 명칭만 변경하였고,³⁵⁾ 일본 궁내성이 1946년 1월 31일자로 이왕직을 공식 폐지한 이후에야, 2월 5일 ‘구왕궁사무청’을 정식으로 설립하였다.³⁶⁾ 이왕직의 제도적 특수성이 미군정의 행정

34) 총독부박물관이 남긴 상당수의 미등록소장품은 기본 정보가 없어서 2000년대 들어 서야 정리가 마무리되었다(장상훈, 「아카이브기행 50-전쟁 피해 조사로부터 소장품 관리체계 정비로」, 『박물관신문』 606호, 2022.).

35) 「李王職의 名稱을 紛에 變更하여 舊王宮이라 稱함」, 군정청법령 제26호 제2조 (1945. 11.8.)

36) 국사편찬위원회, 『편년 대한민국사 1』, 국사편찬위원회, 2011, 152쪽.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왕궁사무청 설립 이후에도 미군정은 이 기관에 대한 실질적 개편을 단행하지 못했다. 이는 구왕구사무청 소관 재산을 ‘적산(敵產)’이 아닌 구왕실의 사유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구왕실 측의 강경한 주장 때문이었다. 구왕실 측근들은 해당 재산에 대한 미군정의 관리를 강하게 반대하며, 미군정기 내내 갈등을 빚었다. 1945년 11월, 일제하 이왕직의 마지막 장관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순종비 순정효황후의 오빠인 윤홍섭을 임명한 것은³⁷⁾ 미군정이 구왕실 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 1948년 5월, 구왕실의 일원인 이달용³⁸⁾이 윤홍섭에 뒤이어 구왕궁사무청 관장에 임명된 것도³⁹⁾ 구 이왕직 재산에 대한 구왕실 측의 소유권 주장과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군정은 구왕궁사무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통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구왕궁사무청 소관 박물관과 동·식물원 재편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졌다. 미군정은 해당 시설을 국유화하여 국립박물관과 국립 과학박물관의 관리 하에 두고자 하였으나, 구왕궁사무청은 이를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협조를 거부했다. 이에 구왕궁사무청이 재산권을 유지하고, 국립박물관과 국립과학박물관이 운영권을 가지는 이중적 관리체제가 논의 되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사안은 미군정에서 ‘가장 성가신 문제’로 평가될 정도였으며, 미군정기 내내 미해결 상태로 방치되었다.⁴⁰⁾

구왕궁사무청은 형식상 관재처 관할 아래 있었지만, 정식 행정기구에 편제되지 못하여 예산 지원에서도 배제되었다. 이에 구왕궁사무청은 운영

37) 「軍政廳辭令 發表」, 『민중일보』, 1945.11.7. ; 김을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페이퍼로드, 2010, 42쪽.

38) 이달용(1883-1948)은 고종의 5촌 조카이다. 종친으로서 고종의 병간호와 영친왕의 결혼식 참석 등 왕실의 대소사를 맡아서 했다.

39) 『舊王宮 인사이동』, 『자유신문』, 1948.5.1.

40) 정태수 편, 앞의 책 上, 1992, 526~534쪽.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창경원과 덕수궁을 각종 행사나 유흥 공간으로 임대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 훼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⁴¹⁾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1947년 5월 서울시는 구왕궁사무청에 창경원의 관리권 이관을 요구하였으나 협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미군정에 중재를 요청한 결과, 민정장관, 사법부장, 농무부장, 물가행정처장, 재무부장으로 구성된 구왕궁관리위원회는 정부 수립 전까지 기존 체제유지로 결론지었다. 이는 미군정이 구왕궁사무청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었다.⁴²⁾

구왕궁 재산의 미군정 관리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국유화를 통한 불하 즉 매각의 우려였다. 미군정은 1945년 9월 25일부로 남한 내 일본 소유재산을 적산으로 규정하고 미군정 소유로 귀속시켰으나,⁴³⁾ 이왕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다만 이왕직을 구왕궁사무청으로 개편하고, 관리 부서로 재산관리과(이후 관재처)를 지정하여 구왕실 재산을 보관하다가 향후 한국 정부에 국유재산으로 이양방침이라는 입장만을 견지했었다.⁴⁴⁾

그런데 1946년 3월, 미군정의 소규모 사업체 불하 결정 발표에 대중들은 토지개혁의 일환으로 인식하며 강하게 반발하였고,⁴⁵⁾ 이에 미군정은 적산불하 결정을 연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에는 귀속재산의 모든 권한을 미군정이 독점하는 관재령 제8호를 공포했다. 이 조치에 대중들은 행정권 이양에 대한 미군정의 진정성을 의심하기까지 이르렀다. 1947년 3월, 대중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미군정은 귀속재산 관리 권한을 한국인 장관에게 위임하는 관재령 9호를 공포하며 귀속재산 불하를 기정사실화했다.⁴⁶⁾

41) 「昌慶苑꽃노리後日 採算안마자 頭痛 舊王宮의 處事を 注視」, 『한성일보』, 1946.5.10. ; 「全國鬪牛大會」, 『경향신문』, 1947.9.27. ; 「제지소로 간 국보·문화재를 돈과 바꾸는 자 누구? '실록' 분실에 여론 비등」, 『서울신문』, 1948.1.9.

42) 「昌慶苑을 娛樂場으로 市에서 軍政當局에 建議」, 『동아일보』, 1947.5.15.

43) 「敗戰國所屬財產의凍結乃至移轉制限에關한件」, 군정청법령 제2호(1945.9.25.)

44) 「前李王職財產 軍政廳이管理」, 『조선일보』, 1946.2.23.

45) 박훈창, 『미군정기 귀속재산 처리와 관재처의 역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6쪽.

관재령 9호 발표 이후, 구왕궁사무청 재산 향방에 다시 논란이 제기되었 다. 이승만은 “이왕직 재산은 적산이 아니므로 미군정의 관리는 부당하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하였다.⁴⁷⁾ 적산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자, 1947년 5월 공보부가 나서 “향후 수립될 정부가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관재처는 구왕궁 재산의 손상이나 명예 실추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라는 입장 을 발표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다.⁴⁸⁾

이처럼 미군정은 구왕궁사무청 재산이 국유화 대상인지, 구왕실의 사유재 산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 결과, 구왕궁사무청은 행정 체계 밖에 머물렀으며 그 여파는 정부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53년 4월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정으로 구황실재산관리사무총국 설립 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비로소 국가 행정조직에 편입되었다.⁴⁹⁾ 이는 미군정이 구왕궁사무청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책 준비가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2. 미군 주둔에 따른 문화유산 훼손 사례

미군정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청사로 사용되면서 경복궁 일대는 미군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고, 이로 인한 경복궁의 훼손 사건이 종종 발생하였다. 병사들이 군홧발로 전각 내부를 돌아다니고, 박물관 수장고로 활용되던 전각 들에도 무단출입이 빈번하였다.⁵⁰⁾ 특히 근정전 인근 전각에 보관된 야나기

46) 이현주, 「해방 직후 적산처리 논쟁과 대일배상요구의 출발」, 『한국근현대사연구』 72, 2015, 224~228쪽.

47) 「이왕직재산은 비적산, 이박사국민회석상서 언명」, 『민중일보』, 1947.5.22.

48) 「이왕직 소유물의 처분, 통일정부수립 후에 공보부에서 발표」, 『중외일보』, 1947.5. 28.; 「임정수립시까지 이왕직 소유물 관재처에서 보관」, 『현대일보』, 1947.5.28.

49) 「구황실재산관리특별회계법」, 법률 제284호(1953.4.18.) ; 「임시구왕국재산관리위원회 사무총국장 임면」 1953.4.20.(국가기록원, BA0086215)

무네요시(柳宗悅)의 수집품은 미군의 약탈 대상이 되었다.⁵¹⁾

미군 개개인이 아닌 미군정에 의해서도 문화유산이 훼손되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개성 만월대와 경복궁 내 막사 사건이다. 1946년 4월, 미군정은 개성에 막사를 건설하려고 고려 왕궁터인 만월대를 파헤쳤다. 이에 개성 지역민들은 크게 분노하였고,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의 송석하는 “일제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라며 미군의 독단적 처사를 강하게 규탄했다.⁵²⁾ 그러나 미군정은 공사를 강행했고, 이에 어린 학생들까지 항의 시위에 나설 정도로 개성 민심이 크게 동요했다.⁵³⁾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GHQ이 랭던 워너와 골든 보울스⁵⁴⁾였다. 당시 서울을 방문 중이던 워너와 보울스는 4월 28일 개성에 직접 가서 상황을 파악했다. 워너는 역사유적 훼손이 국제 협약 위반이라는 점을 현지 사령관에게 주지시키고 공사를 일시 중단시켰다. 서울로 돌아와서 미군정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미군정은 만월대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⁵⁵⁾ 이러한 배경 속에서 40여개 단체가 존 하지(John R. Hodge) 군정 사령관에게 만월대 공사 중단을 요청했을 때, 하지는 공사 중단과 훼손 복구를 약속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⁵⁶⁾ 즉 만월대 공사 중단은 미군정의 자발적 결정이 아니라, 워너와 보울스의 개입에 의한 결과였다.

50) 有光敎一, 앞의 논문, 1997, pp.194~195.

51) 장옥진, 「덕소화실에서」, 『월간 세대』 6월, 1974.

52) 「헬리는 高麗王朝의 勝蹟 吊哭할 秋草도 안남는 滿月臺」, 『한성일보』, 1946.4.27.

53) 「滿月臺 살리자, 開城 시민 궐기 진정」, 『자유신문』, 1946.4.30. ; 「웬말? 滿月臺를 헬다니 元漢慶博士曰“나도 忠告하겠다”」, 『한성일보』, 1946.4.28.

54) 고든 보울스(Gordon T. Bowles, 1904~)는 하버드대학 출신으로 시라큐스대학 인류학과 교수와 국무장관을 역임했다. 태평양전쟁 이후 도쿄 GHQ에서 미술, 유적, 기념물 업무를 담당했고, 일본의 전후 교육개혁 지침을 작성했다(안진이, 앞의 논문, 2006, 30쪽.).

55) 정태수 편, 1992, 앞의 책 下, 홍지원, 323쪽.

56) 「옛모습 찾게된 滿月臺 하—지中將工事中止指令 破損箇所다시 復舊工事」, 『한성일보』, 1946.4.30.

1946년 8월, 만월대 훼손과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미군정은 주택 난을 이유로 경복궁 내에 미군 막사를 건설하려 했다.⁵⁷⁾ 이전에도 이런 계획이 시도되었으나, 그때는 크네즈가 경복궁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내세워 이를 막았다.⁵⁸⁾ 그러나 8월 17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에 국립박물관, 고적보존회, 진단학회 등이 미군정에 경복궁 원형 보존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⁵⁹⁾ 경복궁이 본격적으로 훼손되었다.⁶⁰⁾

훼손된 경복궁의 사진이 신문에 실리면서 대중의 분노가 커졌고, 조선문화단체총연맹 등 37개 단체가 총궐기하여 미군정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⁶¹⁾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도 논의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고,⁶²⁾ 각계에서는 문화유산보호가 국제적 관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⁶³⁾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무시하고 계획대로 공사를 강행했다.⁶⁴⁾ 이로 인해 국립박물관은 광복 1주년을 기념한 호우총 특별전을 조기 종료하고 1947년 6월까지 약 9개월간 임시 휴관을 했다.⁶⁵⁾

경복궁 훼손의 심각성은 GHQ 셔먼 리⁶⁶⁾의 회고로도 알 수 있다. 그는 “트럭과 지프를 운전하는 군인들은 궁궐 내 기념물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

57) 「景福宮內庭에 美軍家族住宅建築」, 『동아일보』, 1946.8.7. ; 「경복궁 내 미군병사 건축문제 진상 보고서 발표」,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1946.8.21.

58) 유진 크네즈, 앞의 책, 1997, 18쪽.

59) 「고적보존회, 경복궁내 미장병 사택 건축 제고 건의서 제출」, 『서울신문』, 1946.8.20.

60) 「파헤쳐진宮闈柱礎」, 『동아일보』, 1946.08.24. ; 「국립박물관장 김재원, 경복궁내 미군숙사 건축 중 유물 손상에 대해 기자회견」, 『서울신문』, 1946.8.24.

61) 「景福宮安兵舍强行에卅七團體反對의烽火」, 『조선일보』, 1946.8.25.

62) 「官舍로使用」, 『조선일보』, 1948.12.2.

63) 「嘆息하는古宮의遺蹟」, 『조선일보』, 1946.8.20.

64) 「景福宮兵舍는 計畫대로實行」, 『조선일보』, 1946.8.28.

6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 : 1945~2005』, 2006, 15쪽.

66) 셔먼 리(Sherman E. Lee, 1918~2008)는 1945년 말 GHQ의 예술 및 기념물 부서에서 일본의 문화유산 보호와 보존 임무를 맡았던 모뉴먼츠 맨이다.

<https://www.monumentsmenandwomenfnd.org/monuments-men-and-women/sherman-emery-lee> 접속일 :2025.5.10.).

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석탑과 건물들이 최근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이다”라고 기록하였다.⁶⁷⁾ 만일대 사건과 달리, 미군정은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다. 국립박물관을 임시 휴관시키고 이에 반대한 김재원을 징계하는 등 오히려 강경한 입장은 보였다. 이는 위너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미군정이 경복궁을 역사적 기념물이라기보다 일제 와 마찬가지로 행정적 통치 공간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미군정이 한국 문화유산 보호에 체계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물론 이순신 승전비의 원적지 반환과 원각사지 10층 석탑 복원 그리고 산청 범학리 석탑 복원 같은 사례도 있었으나,⁶⁸⁾ 이는 미군정의 정책적 접근이 아닌 인류학을 전공한 문화유산 담당 장교 크네즈의 개인적 관심과 호의에 의한 예외적 사례였다. 실제로 미군정기 문화유산 보호와 복원 사례는 크네즈의 복무 기간에만 집중되었다. 이러한 정황은 미군정이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에 대해 명확한 정책 방향이나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IV. 미군정 문화유산정책의 구조적 특징

1. 현상유지기조와 제도적 무계획성

미군정은 국립박물관을 신속히 행정기구 체계 안으로 편입시켰으나, 구왕 궁사무청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실상 행정체제

67) Sherman Lee, “My Work in Japan,” *The Confusion Era: Art and Culture of Japan during the Allied Occupation, 1945–1952* (Washington, DC), 1997, pp.96–98.

68) 「일제하 행방불명되었던 명량대첩비」, 『매일신보』, 1945.11.2.; 「파고다公園의多寶塔」, 『동아일보』, 1946.2.18. : 국립박물관, 『관보』 1, 1947, 8쪽.

밖에 방치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 상반된 정책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미군정의 일관된 인식이 작동하고 있었다. 즉, 기존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현상을 유지하려는 미군정의 통치 기조가 문화유산 정책 전반에 투영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현상유지정책’은 미군정이 남한 통치에서 일관되게 취한 기본 방침이었다.⁶⁹⁾ 이는 미군이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 통치 방안 그리고 명확한 정책 지침 없이 한국에 진주하였다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 사령관 하자는 한국 경험이 없는 일본 전문가 머렐 베닝호프(H. Merrell Benninghoff) 한 명과 국가 행정 경험이 없는 소수의 군 장교들을 데리고 미군정을 시작했다.⁷⁰⁾ 이러한 한계 속에 미군정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추구하기보다는 조선총독부 기구를 활용하고 일본 관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였다.

현상유지기조는 문화유산 정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그 대표적 사례가 국립박물관의 개관이다. 행정 능력을 갖춘 한국인이 없어 일본인 관리를 당장 해임하기에 곤란하다는 미군정의 논리에 따라,⁷¹⁾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책임자였던 아리미쓰를 다시 고용하여 개관 작업을 맡겼다. 이는 가시적인 행정 성과를 위해 기존 식민지 체제를 유지하려 한 미군정의 방침을 잘 보여준다. 또한 전례가 없는 아리미쓰의 두 차례 채용은 미군정이 국립박물관 운영에 있어 현상유지 정책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국립박물관 내 식민지적 구조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유지기조는 구왕궁사무청에 대한 조치에서도 명확히 드러난

69) 정용욱, 『1942~47년 미국의 대한정책과 과도정부 형태 구상』,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1996, 69~70쪽.

70) George M. McCune, “Occupation Politics in Korea”, *Far Eastern Survey*, Vol.15(3), 1946, p.34.

71) 김국태, 『해방 3년과 미국』 I, 돌베개, 1984, 49~58쪽

다. 미군정은 이왕직을 ‘구왕궁’으로 개칭하고, 구왕궁사무청을 통해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만 취함으로써 기존 체제를 사실상 유지하였다. 그 결과로 미군정은 구왕궁사무청 소관 재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지 못한 채, 이를 ‘준적산’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1948년 9월 대한민국 정부에 이관했다.⁷²⁾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유사한 태도가 확인된다. 1947년 9월 추진된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은 사찰 재산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을 이유로 결국 중단되었다. 이는 미군정이 복잡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는 개입을 회피하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⁷³⁾

국립박물관과 구왕궁사무청, 문화유산 법령 제정 등에 대한 미군정의 상이한 대응은 모두 통치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된 ‘현상유지기조’의 다양한 표현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인 관리를 통해 행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정치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는 개입이나 개혁을 지양하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군정의 문화유산 정책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현상유지기조는 문화유산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무계획성으로 귀결되기 쉬운 한계를 내포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점령지였던 일본에 대한 연합군의 대응과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하다. GHQ는 일본 점령 직후, 유럽에서 활동한 이른바 ‘모뉴먼츠 맨’에 해당하는 예술 및 기념물 부서(Arts and Monuments Section, A&M)를 설치하고, 랭던 위너, 로렌스 시크만⁷⁴⁾, 셔먼

72) 「韓·美行政移讓協定細目」, 『조선일보』, 1948.9.17.

73) 김종수, 『한국 문화재 제도 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44~151쪽.

74) 로렌스 시크만(Laurence Sickman, 1906~1988)은 하버드대에서 위너에게 아시아 미술을 배웠다. 위너의 추천으로 1945년 8월 도쿄 GHQ의 기념물 부서에 배치되어 중국, 한국의 문화유산 조사를 담당했다

(<https://www.monumentsmenfoundation.org/sickman-maj-laurence-c->

리 등 아시아미술 전문가들을 배치하며 일본의 문화유산 보호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그림 4]. 이는 일본 미술을 높이 평가하며 일본 학계와의 오랫동안 교류해 온 위너와 같은 미국 내 전문가들의 영향이다. A&M 소속 전문가들은 일본인 학자들과 협력하여 주요 문화유산의 위치를 파악하며 보존 및 보호조치를 하는 등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⁷⁵⁾ 즉 GHQ가 직접 일본 문화유산 보호에 앞장섰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 사례에 비해, 미군정이 한국에서 취한 방식은 그 출발부터 현저히 달랐다. 미군정은 문화유산 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 학무국을 설치하였으나, 이는 라카드 대위를 국장으로, 해군 중위 1명, 육군 중위 1명, 사병 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에 불과하였다.⁷⁶⁾ 1945년 10월, GHQ는 미군정에 한국 내 문화유산 현황 조사를 지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1946년 6월에 제출된 「한국의 예술품 및 유적에 관한 최초의 비망록」이라는 3쪽 분량의 간략한 문건에 그쳤다.⁷⁷⁾ 이처럼 조사와 보고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으며, 학무국의 실질적 대응 역량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크네즈는 GHQ에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시크만 등 소수의 전문가가 1945년 12월 말 남한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단 3일간의 짧은 체류 동안 개성과 경주를 형식적으로 둘러본 후 떠났고, 후속 조치 없이 철수했다. 그리고 문화유산 약탈 방지를 위한 기본 지침서조차 이후 7개월이 지나서야 배포되었다.⁷⁸⁾ 실질적인 문화유산 조사는 1946년 5월 헬렌 채핀⁷⁹⁾이 한국에 파견되면서 비로소 이루어졌다.⁸⁰⁾

s접속일:2025.5.10.)

- 75) Christine Kim, 2017, "Colonial Plunder and the Failure of Restitution in Postwar Korea",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52(3), pp.607~624.
- 76) 정태수, 앞의 논문, 1988, 80쪽.
- 77) 안진이, 앞의 논문, 2006, 29~31쪽.
- 78) Christine Kim, op. cit., pp.618~619.
- 79) 헬렌 채핀(Helen Chapin, 1892~1950)은 동양학 전공자로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과 일본의 자료 수집을 담당한 정보 분석가로 일했다. 1946년에는 GHQ 기념물

하지만 이 조사 역시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대장을 그대로 활용하는 수준에서 이뤄져 현상유지 기조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결국 미군정의 문화유산 보호 체계는 구조적으로 미비하였고, 조사 역시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와 같은 미군정의 소극적인 대응은 단순히 조직의 한계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이는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무관심과 정책적 기획의 부재, 즉 ‘현상유지’ 기조에 입각한 통치 방침의 연장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문화유산 정책 수립이나 제도 개혁보다는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하려는 태도가 문화유산 조사와 보호 활동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된 것이다.

2. 문화유산정책에 내재된 이중적 식민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점령지에서 전체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교육을 확산하는 것을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이런 방침에 따라서 미군정도 한국에서 친미적 여론 형성과 미국식 제도·가치의 수용 유도를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⁸¹⁾ 그러나 미군정은 실제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일제 식민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활용하는 ‘현상유지정책’을 택함으로써, 표면적 민주주의와 식민지 구조가 공존하는 모순을 낳았다.

이러한 모순은 국립박물관 개관과 호우총 발굴을 통해 특히 명확히 드러난다. 문화유산 정책 전반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미군정이 유독 이 두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이들이 미국의 대외공보전략과 직접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미군정은 문화사업을 통해 미국이 한국인의 문화적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해방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한 것이다.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었다(이혜은, 앞의 논문, 2021, 183~184쪽.).

80) 안진이, 앞의 논문, 2006, 30~32쪽.

81) 김균, 앞의 논문, 2000, 52~56쪽.

특히, 일제 식민통치자와 대비되는 미국의 문화적 우위를 부각시켜 남한을 미국 헤게모니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이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군정은 김재원을 국립박물관의 관장에 발탁하였다. 이는 인물의 전문성보다는 미군정 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 인사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재원은 1948년 록펠러재단이 실시한 한국 문화지원 프로그램의 첫 연수생으로 선발되어 약 9개월간 미국 연수를 받았다. 이후 1950년대 미국의 문화유산 원조와 지원은 김재원을 통해 국립박물관에 집중되었다.⁸²⁾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립박물관은 미국의 문화정책이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핵심 매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김재원은 그 실행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박물관 개관과 호우총 발굴, 그리고 김재원의 발탁을 통해 미국의 문화적 헤게모니 구축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아리미쓰 유임으로 인해 기존 식민 통치 구조 역시 지속되었다. 아리미쓰는 단순히 박물관 개관을 준비하고 경주 발굴을 담당한 것만이 아니라, 박물관 운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였다. 김재원은 한국인 신규 채용, 박물관의 학무국 교화과로부터의 분리 및 독립 기관화, 고건축 수리 업무의 이관 등 주요 행정체계를 아리미쓰의 조언에 따랐다.⁸³⁾ 이는 일제 식민체제가 한국 국립박물관 운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여지를 남겼다.

새롭게 출범한 국립박물관은 탈식민화된 문화기관으로 인식되었지만, 운영 구조, 소장품, 전시 체계 등에서 조선총독부박물관과 본질적으로 차별화되지 못하였다. 특히 한국 고대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호우총 발굴이 아리미쓰에 의해 주도되면서, 일본 학자에 의한 한국 발굴이 한국 문화유산

82) 김재원, 앞의 책, 1992, 100쪽.; 정종현, 「1950년대 아시아재단의 민족문화유산 지원 연구-국립중앙박물관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2, 2019, 132~133쪽.

83) 고적 수리를 비롯한 보호·보존 업무가 박물관이 아닌 국가유산청 소관으로 정착되게 된 연원이다.

보존에 기여했다는 식민사관의 틀을 재생산하는 역설적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로써 국립박물관은 미국의 문화적 혜계모니와 일제의 식민유산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적 식민성을 내포한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게다가, 미군정 문화정책에 내재된 이중적 식민성은 워너와 같은 미국 전문가들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워너는 오랜 기간 일본 학자들과 교류해 온 인물로, 일제의 문화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선총독부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워너는 1910년 조선총독부박물관을 관람한 뒤, “박물관을 만드는 법은 간단하다. 한 나라를 점령하고 왕을 내쫓은 후, 그 건물에 전시실을 꾸미면 된다.”고 언급하며, 총독부 주도의 박물관 운영이 미국식 박물관 모델보다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⁸⁴⁾

이러한 식민주의적 시각은 워너가 1944년 모뉴먼츠 맨으로 작성한 9쪽 분량의 『List of Monuments in Korea』 서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워너는 “한국인들은 자국의 문화유산에 관심과 지식이 없으며, 조선총독부가 유물을 수집하고 보존해 왔으므로 일제가 구축한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라고⁸⁵⁾ 주장하였다[그림 5]. 이는 식민지 체제하에서의 문화유산 관리를 정당화하고, 해방 이후에도 일본에 의한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한국인의 문화 주체성을 배제하는 전형적인 식민주의 담론이었다.

태평양전쟁 이후 아시아미술 분야의 권위자로 부상한 워너는 미군정의 문화유산 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일제 식민체제를 긍정하는 워너의 인식은 미군정이 일본인 관리자 아리미쓰 교이치를 유임시키고, 그에게 국립

84) Theodore Bowie, *Langdon Warner through his letters*, Indiana University Press, 1966, p.36. ; Logan Seay Ward, *Colonial Connections: Interpreting and Representing Korea through Art and Material Culture at the Cleveland Museum of Art(1914-1945)*, Ohio State University, 2021, pp.108~109.

85) Langdon Warner, 1944, “List of Monuments in Korea,”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Monuments*, American Defense-Harvard Group, Fine Arts Library, Harvard University.

박물관 개관과 경주 발굴을 맡긴 결정에도 반영되었다. 1946년 경주 발굴 계획의 일시 중단과 재개, 개성 만월대 공사의 중단 등 일련의 조치 또한 GHQ 고문으로서 워너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시크만도 아리미쓰의 유임이 타당하고 당연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이를 권고했다.⁸⁶⁾ 이처럼 한국 문화유산은 일본인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워너를 비롯한 GHQ의 A&M 전반에 공유된 시각이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미군정은 국립박물관 개관과 호우총 발굴과 같은 상징적 문화사업을 통해 한국 사회에 미국적 가치와 문화적 우월성을 심고, 남한을 미국 중심의 문화체계모니에 편입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전략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현상유지라는 기조 아래 일본인 아리미쓰가 핵심 문화사업을 주도하면서 일제의 식민체제 또한 그대로 내재화되었다. 더불어 한국 문화유산은 일본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워너 등 미국 전문가들의 인식은 미군정의 이런 정책에 이념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미군정의 문화유산정책에는 미국적 가치와 일제의 식민유산이 공존하는 ‘이중적 식민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게 되었다.

V. 맷음말

본 연구는 해방 직후 미군정의 문화유산 정책 기조와 그 구조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인들에게 독립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국립박물관 개관과 호우총 발굴이 미군정에게는 한국인의 지지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남한을 미국의 협정모니 내로 편입하기 위한 문화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군정은 이 같은 문화사업을 통해 한국의 문화

86) David I. Steinberg, “The National Museum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ogang Journal of English Studies*, Vol.44(1), 1968.
(접속일: 2025.5.10. <http://anthony.sogang.ac.kr/transactions/tablesOfContents.html>)

주권이 미국 지원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대미 우호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으며, 이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과와는 달리, 미군정은 한국의 문화적 자립과 주체성 확립에 실질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인 관리의 유임을 통해 일제의 총독부 체제를 유지하는 현상유지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국립박물관이 독립 국가의 상징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식민지체제의 연장선에서 운영될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미군정은 박물관과 같은 상징적 문화공간을 통해 미국적 가치를 심으려는 한편, 일제 식민 체제를 일정 부분 수용·활용하는 이중적 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한국 문화유산은 일본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워너를 비롯한 미국 전문가들의 영향은 미군정의 정책 결정에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그 결과, 미군정의 문화유산 정책은 미국의 해제모니 확립과 일제 잔재의 지속이라는 이중적 식민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게 되었다.

문화유산 사업이 미군정의 지휘 아래 일본인 주도로 추진되었다는 점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식민지적 구조를 극복하기보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문화제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한계를 보여준다. 형식적으로는 미국의 시스템 속에서 이뤄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식민지적 인력과 제도에 의해서 이뤄지면서 문화유산 정책에 식민성이 제도화되는 복잡한 역사적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해방 이후 한국 문화유산 정책의 ‘탈식민화’는 장기적으로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까지도 그 유산이 제도와 인식 속에 일정 부분 잔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정기의 문화유산 정책은 일시적 과도기 조치가 아니라 해방 이후 한국 문화유산 정책의 구조적 토대로 작용해왔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문화일보』, 『민중일보』, 『서울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 『중외일보』, 『한성일보』

The Monuments Men and Women Foundation <https://www.monumentsmenandwomenfnd.org>

Dictionary of Art Historians <https://arthistorians.info>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 : 1945-2005』, 200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전군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국사편찬위원회, 『편년 대한민국사 1』, 국사편찬위원회, 2011.

국립박물관, 『관보』 1, 1947.

김국태, 『해방 3년과 미국』 I, 돌베개, 1984.

김균, 「미국의 대외문화정책을 통해 본 미군정 문화정책」, 『한국언론학보』 44(3), 2000.

김을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페이퍼로드, 2010.

김재원, 『경복궁야화』, 탐구당, 1991.

김재원, 『박물관과 한평생』, 탐구당, 1992.

김종수, 『한국 문화재 제도 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박명수, 「해방 직후 조선학술원의 창립과정과 그 성격」, 『승실사학』 45, 2020.

박훈창, 『미군정기 귀속재산 처리와 관재처의 역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안진이, 『미군정의 문화정책과 시각문화, 1945-1948』,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오영찬, 『조선총독부박물관과 식민주의』,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유진 크네즈(Eugene I. Knez), 『한 이방인의 한국사랑』, 국립중앙박물관, 1997.

이현주, 「해방 직후 적산처리 논쟁과 대일배상요구의 출발」, 『한국근현대사연구』 72, 2015.

이혜은, 「미군정의 한국문화재 조사 활동」, 『서지학연구』 85, 2021.

- 장상훈, 「아카이브기행 8-해방공간 국립박물관의 전시(1)」, 『박물관신문』 564호, 2018.
- 장상훈, 「아카이브기행 50-전쟁 피해 조사로부터 소장품 관리체계 정비로」, 『박물관신문』 606호, 2022.
- 장옥진, 「덕소화실에서」, 『월간 세대』 6월, 1974.
- 정무정, 「美軍政期의 문화정책과 미술계」, 『미술연구』 18. 2004.
- 정무정, 「《한국 국보전》 전사(前史): 불발된 1947년 한국미술전 계획」, 『미술사학』 47, 2024.
- 정용우, 「1942~47년 미국의 대한정책과 과도정부 형태 구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정종현, 「1950년대 아시아재단의 민족문화유산 지원 연구-국립중앙박물관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2, 2019.
- 정태수, 「미군정기 한국교육행정의 기구와 요원의 연구-미국측 사료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6(1), 1988.
- 정태수 편, 『미군정기 한국교육사자료집』 上·下, 흥지원, 1992.
- 최광식, 「미래를 향한 박물관을 위하여」, 『박물관에 살다 한국 박물관 100년의 사람들』, 국립중앙박물관, 2009.
- 최승만, 『나의 回顧錄』, 인하대학교출판부, 1985.
- 최효은, 「한국전쟁 정전협상 통역은 누가 했을까: 번역고고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한국인 통역자 탐색」, 『번역학연구』 24(1), 2023.
- 한창균, 『하답 도유호』, 혜안, 2017.
- 有光教一, 「私の朝鮮考古學」, 『朝鮮學事始め』, 青丘文化社, 1997.
- Christine Kim, "Colonial Plunder and the Failure of Restitution in Postwar Korea",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52(3), 2017.
- David I. Steinberg, "The National Museum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ogang Journal of English Studies*, Vol.44(1), 1968.
- George M. McCune, "Occupation Politics in Korea", *Far Eastern Survey*, Vol.15(3), 1946.
- Langdon Warner, "List of Monuments in Korea,"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 Monuments*, American Defense-Harvard Group, Fine Arts Library, Harvard University, 1944.
- Logan Seay Ward, “*Colonial Connections: Interpreting and Representing Korea through Art and Material Culture at the Cleveland Museum of Art(1914–1945)*,” Ohio State University, 2021.
- Sherman Lee, “My Work in Japan,” *The Confusion Era: Art and Culture of Japan during the Allied Occupation, 1945–1952* (Washington, D.C.), 1997.
- Theodore Bowie, *Langdon Warner though his letters*, Indiana University Press,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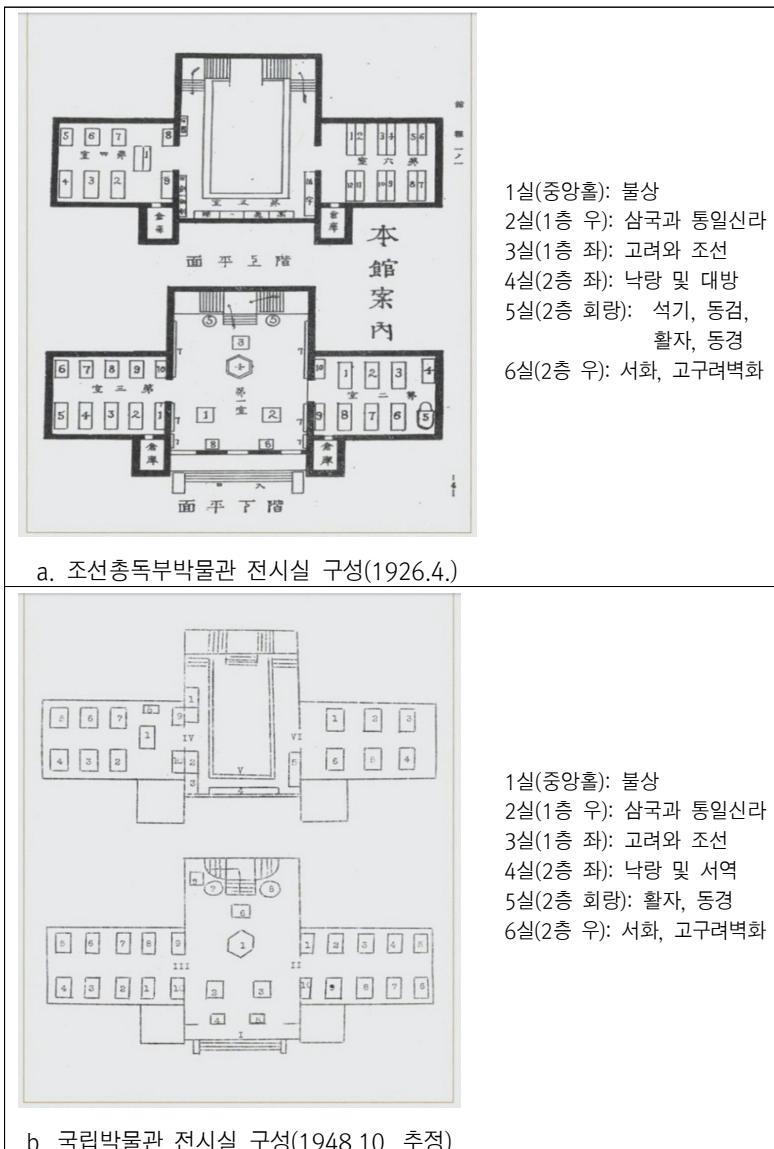


그림 1. 전시실 구성 비교(장상훈, 아카이브 기행 8 활용)



그림 2. 발굴조사를 지켜보는 미군들(국립중앙박물관, 건판 27673)



그림 3. 발굴조사 전 아리미쓰와 김재원(국립중앙박물관, 건판 27644)



그림 4. 1946년 일본 니시혼간지에서 랭던 워너(가운데)와 일본 관리들(Archives of American Art, Smithsonian Instit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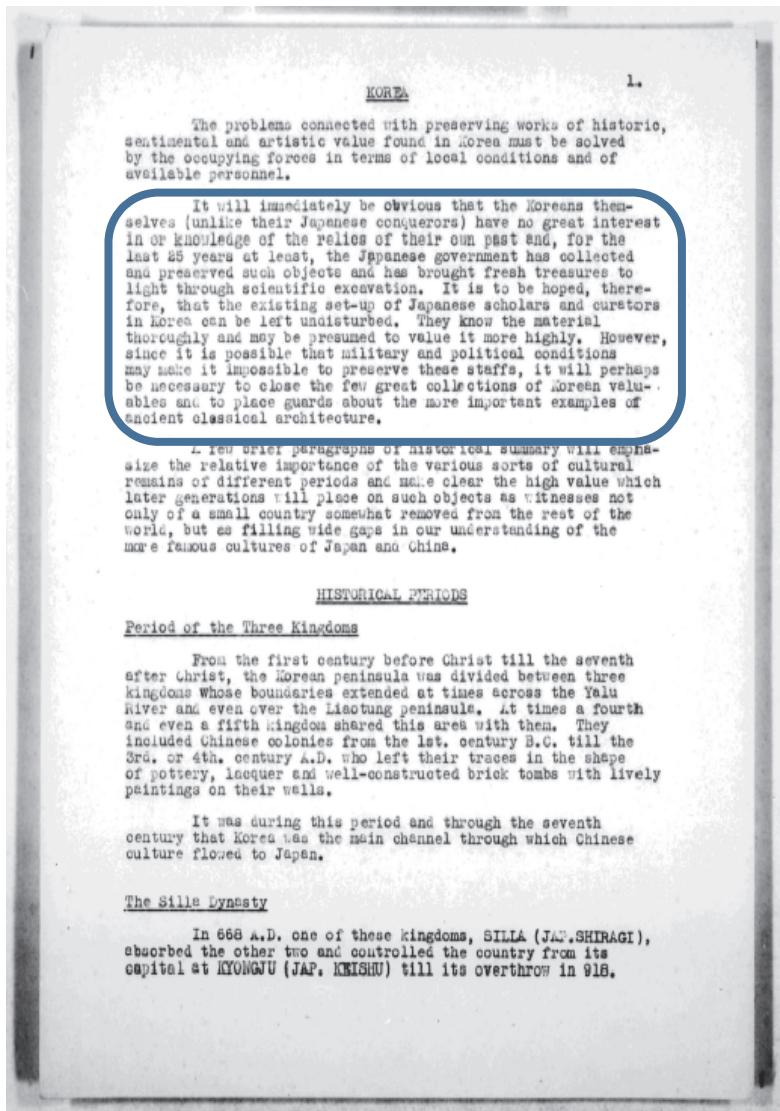


그림 5.『List of Monuments in Korea』(랜던 워너, 1944)

Abstract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STATUS QUO POLICY, AMBIGUITY, AND DUAL COLONIALITY

KIM HYUNJUNG(KIM, HYUN JUNG)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orientation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regarding cultural heritage during the immediate post-liberation period. While the opening of the National Museum in December 1945 and the excavation of the Ho-U Tomb in 1946 were viewed by Koreans as symbols of restored cultural sovereignty, they also served as political tools for the USAMGIK to reinforce American hegemony in southern Korea. The appointment of Kim Chaewon, a figure seen as aligned with U.S. interests, and the retention of Japanese official Arimitsu Kyoichi under a policy of administrative continuity illustrate this strategic intent. As a result, American democratic ideals and Japanese colonial legacies became structurally intertwined in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of the USAMGIK.

This Status quo policy approach was further evident in the government's deferral of decisions on the legal status of former royal properties and its tolerance of military use of heritage sites. Moreover, this stance was ideologically reinforced by U.S. experts like Langdon Warner, who advocated for continued Japanese oversight of Korean heritage based on

a colonialist perception of Korean incapacity.

In conclusion, the USAMGIK's cultural heritage policy was not driven by a commitment to postcolonial reform, but operated within a framework of "dual coloniality," where American cultural dominance and Japanese colonial structures coexisted and mutually reinforced one another.

Key Words : National Museum of Korea, Status Quo Policy, Dual Colonial Legacy, Kim Chewon, Arimitsu Kyoichi, Langdon Warner.

